

전남대병원 결국 축소 운영...2개 병동 폐쇄

전공의 장기 공백에 환자 수용 줄여...조선대병원도 병상 절반만 채워 미래 의료인력 간호사 실습교육 차질...전공의 면허정지 실효성 의문도

전남대병원이 전공의들의 장기 공백으로 환자 수용을 줄이면서 일부 병동을 폐쇄했다. 전남대병원은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지 16일째인 6일 2개 병동의 가동을 중단했다. 공식적으로 병동을 폐쇄한 것은 의료사태 이후 처음이다.

병상 가동 축소에 따라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연일 가중되고 있으며, 간호사 실습생들의 현장교육에도 차질을 빚는 등 곳곳에서 의료공백에 따른 후유증이 깊어지고 있다.

◇전남대 병원 '병동 통-폐합'=전남대병원은 의료진 부족으로 2개 병동을 폐쇄하고 의료진을 재배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정부의 면허정지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져본 신장'이나,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면허정지까지 실제 수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

일반적인 면허정지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송달된 뒤 이에 대한 의견접수를 받는다. 이후 최종 면허정지여부가 결정된다.

결국 사전통지서 송달까지 몇 주가 소요되고 의견접수 기간도 2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빨라도 3월 말이 돼야 면허정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면허정지를 받은 전공의들이 법적대응을 하게 되면 기간은 또 늘어나게 된다. 효력정지 가져

본 신청을 하게 되면 첫 기일까지 2주 이상이 소요될 것이고 재판부가 양측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리는 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소 한달가량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만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부의 면허정지 효력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사전통지지만으로는 면허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법적대응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면허정지 이후에는 바로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에 피해는 환자와 의료진들로=전공의 이탈로 커진 의료공백의 피해가 환자와 환자가족뿐 아니라 실습받는 미래의 의료진에게 까지 커지고 있다.

지역 미래 의료인력인 간호사들이 광주지역 상급병원들이 축소 운영을 하면서 제대로 실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실습을 받아야 할 간호인력들이 진료와 수술 견수 등이 크게 줄면서 입원환자가 급감해 현장체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실습간호사는 "할 일 없이 몇시간씩 있다가 집에 오고 있다"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A씨는 "환자가 없다보니 하루종일 같은 환자의 바이탈(혈압·맥박·호흡수·체온 등)만 체크하고 있어 오히려 환자들이 너무 잦은 바이탈 점검에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말했다.

조선대병원에서 실습중인 B씨는 "지난주부터 실습하고 있지만, 응급실에도 환자가 많지 않아 병원의 정상적인 모습인가 의문이 든다"면서 "환자가 많지 않고 병원이 정상 운영이 되지 않아 실습생으로서 배우는 게 확실치 않게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재 발생 대비 훈련 재난상황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6일 오후 광주시 북구 중흥도서관에서 북구청 직원, 민방위대, 자율방재단이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 대비 훈련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영암 외국인전용클럽서 불법체류 외국인 70명 적발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예약제로 운영하던 영암의 한 외국인전용클럽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7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서해지방해경청, 목포해경과 합동으로 지난 3일 새벽 영암군에 있는 외국인전용클럽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유흥업주인인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 2명 등 불법체류 외국인 총 70명을 검거했다.

이번 단속은 영암의 한 외국인전용클럽에서 "외국인 종업원을 고용하고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손님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음주·무면허 운전 등을 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진행됐다. 이에 따라 광주출입국사무소는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을 나섰다.

이 외국인전용클럽은 외국인 전용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영업 중에도 출입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입구 및 주변도로에 설치한 CCTV 등을 통해 출입자를 통제하면서 예약자가 외국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문을 열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불법체류외국인 70명은 전원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조치가 진행된다. 이들의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될 예정이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단속을 회피하는 외국인전용클럽·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영장집행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고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낚시객 22명 선원으로 위장 영해 밖에서 버젓이 낚시

짜릿한 '손맛'을 원하는 낚시객을 선원으로 둔갑시켜 불법으로 영해 밖에서 낚시를 하거나 선박이 적발됐다.

목포해경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안전적 A호(9.77t, 연안복합어업)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호는 지난 4일 새벽 2시 50분께 신안군 임자면 진리항 선착장에서 낚시객 22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키고 영해를 벗어나 불법으로 낚시 영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호가 출항을 할 때마다 선원이 바뀌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A호는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 신고해 어선으로 출항하면 영해 밖에서도 조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은 사도지사의 관할 구역이며, 외곽 한계는 영해선 내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낚시객들은 고기가 많이 잡힐 수 있는 기대감에 영해 외곽 낚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낚시객들은 감성돔과 우럭 등이 영해 밖에서 많이 잡힌다는 점에서 불법임에도 영해 밖 낚시를 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시, 5·18조사위 보고서 시민 의견 수렴

부실 지적에 권고사항 작성키로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에 수록될 대국가 권고사항을 작성하기 위해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하지만, '권고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한계와 '조사결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는 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교육관에서 '진상조사위 중립보고서 권고사항 의견서 작성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광주시에 따르면 권고사항으로는 진상조사

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 및 희생자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 '진상규명 불능' 결정된 사건에 대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 법·제도·정책·관행에 대해 시정할 조치 등이 담길 수 있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광주시민사회에서는 "의견 수렴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견 수렴 및 권고만으로는 시민사회 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온 진상조사위의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대법원은 5월 21일 11공수 63대대 권모 일병의 사망 원인은 '시민군이 아닌 계엄군 장

갑자에 깔려 사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일관적인 진술을 받아내지 못했고 신체 검안서를 통해서도 정확한 사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 이유로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

'5월 21일 오후 1시 이전에 시위대가 무기고 습격 및 무기탈취를 통해 무장을 시작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는 법원 판결도 부정했다. 진상조사위는 보고서에 '무기 피탈 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 '21일 오전 8시 10분께 계엄군의 실탄 분실사태에 대한 군 기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썼다.

오월정신자기기 범시도민대책위 관계자는 "무기고 피습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진보·보수 위원들이 모두 진상규명불능 판단을 내릴 만큼 조사가 허술했다"며 "왜곡하지 말라고 진상규명했는데 오히려

왜곡의 단초를 준 셈인데, 수정조차 못 하고 조사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무슨 의견을 내겠느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진상조사위가 4년 동안 조사를 이어오며 광주시민에게 한 차례도 공개 검토·논의의 시간을 주지 않았다가 급박하게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의 한 회원은 "'군·경 피해 회복 등 5·18 당사자들조차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은데, 보고서 수정조차 못 할거면 뭐하러 의견 수렴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연식 진상조사위 조사2과장은 "조사 과정에서 미진한 점에 대한 지적사항 또한 추가 의견으로 얼마든지 종합보고서에 수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